

2015년도  
일반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5. 12.

감 사 부

## [ 목 차 ]

<b>I. 감사실시 개요</b>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b>II. 감사결과 요약</b>	2
<b>III.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 사항</b>	3
1.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처리 적정성	3
2. 대가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적정성	6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환급 관리 부적정	8
4. 구매계약 업무 처리의 적정성	10
5.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비용 관리 적정성	13
6.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등의 운영·관리업무 적정성	16
7.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식당 위탁운영기업 시설사용보증금 징구 부적정	20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연구원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 분야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분석하여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하였다.

## 2. 감사대상

감사대상은 연구원 전부서이며, 연구원 경영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 일상감사를 통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일상감사 제외사항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감사대상을 정하였다.

##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연구원에서 2014.1.1. ~ 2015.10.31.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외부의 감사인을 초빙하여 협동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관리 실태를 처음 감사하였고, 정산 불인정액 처리 실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5.11.2.부터 2015.11.13.까지 협동감사인 2인 포함 총 8명의 감사인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상문제점을 정리하여 2015.11.16.부터 12.18.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실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2015.12.29.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결과 요약

### 1. 지적사항 총괄

합 계			변상	회수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총건수	신문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5건	279명	35,421,319원	1건	2건	1건 (2명)	2건	-	3건 (277명)	6건

### 2. 처분요구사항 요약

분야	지적사항	처분요구
회계	1.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처리의 적정성	시정, 회수(1,882,462원)
	▶ 연구비 불인정액 지출계정 부적정 ▶ 연구비 부당집행에 관한 처리 부적정	시정 회수(1,882,462원)
인사 · 교육	2. 대가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적정성	개선,주의(275명), 회수(868,950원)
	▶ 대가성 대외활동 관리 부적정 ▶ 대가성 대외활동 미신고 및 기준 미준수 ▶ 출장비 중복 수령	개선 주의(275명) 회수(868,950원)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환급 관리 부적정	시정 (25,491,597원)
구매	4. 구매계약 업무 처리의 적정성(미래부 협동감사)	주의(2명)
	▶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 입찰방법 부적정	주의(1명) 주의(1명)
지적 재산 관리	5.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비용 관리의 적정성	개선(3건)
	▶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 지식재산권 비용 관리 부적정 ▶ 지식재산권 자문회사 운영 부적정	개선 개선 개선
융합 기술 연구 생산 센터	6.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등의 운영 · 관리업무의 적정성	개선(2건)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운영 · 관리업무 부적정 ▶ 직무분장, 위임전결 기준 등 업무처리 근거 부적정	개선 개선
	7.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식당 위탁운영기업 시설사용보증금 징구 부적정	징계(2명) 변상(7,178,310원)

### Ⅲ.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 사항

#### 1.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처리의 적정성

가. 관련부서: 00팀

나. 감사내용

##### ① 연구비 불인정액 지출계정 부적정

연구원 사업관리부서에서는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 집행결과 발생한 불인정액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회계결산 반영 계획(문서번호:9114-2012-0040)’ 및 ‘WBS프로젝트(10MS5700)의 사업비 재정산 결과통보’에 따른 조치사항 (문서번호:9122-2012-1185)’ (이하 ‘내부문서’)에 근거하여 불인정액을 연구비 수입계정인 선수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한편, 연구원 「회계요령」 제55조에 따르면 수익은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구원 「회계요령」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모든 지출은 지출발의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의 지출발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연구원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내부문서’를 근거로 2014.1.1.부터 2015.10.30.까지 총83건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연구비 수입계정인 선수금에서 직접 지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

## ② 연구비 부당집행에 관한 처리 부적정

연구원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적정집행을 위한 개선(9122-2011-1316, 2011.8.17.)’, ‘WBS프로젝트(10MS5700)의 사업비 재정산 결과통보에 따른 조치사항 (9122-2012-1185, 2012.11.14.)’ 및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처리 지침 개정, 시행 (9122-2014-14705, 2014.10.31.)’ (이하 ‘내부문서’)에 따라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 집행결과 발생한 불인정액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의비 등 직접비는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고, 회의비 집행 시 외부기관의 참석 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및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서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발생한 개인성 부당집행 불인정액에 대해서는 임·직원 개인이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사업관리부서에서는 내부문서를 근거로 개인성 부당집행 불인정금액에 대하여도 연구원 회계로 반납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성 부당집행 불인정액 총4건이 연구원 회계로 반납 처리되었다.

## 다. 조치할 사항

① 원장은 부적정하게 처리된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지출계정을 적정하게 시정조치하고,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장은 부당하게 집행한 개인성 부당집행 불인정 반납금액을 회수조치하고,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2. 대가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가. 관련부서 및 관련자: OO팀, 해당 직원

### 나. 감사내용

연구원은 2014.01.01.~2015.10.31.까지 약 6,300여건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107,000여건의 출장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한편,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21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의 경우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강의·회의 등 대외활동을 임의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출장내역 및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 사전 승인 여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기준 준수 여부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대외활동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속 직원 206명이 2년 동안 464건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행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대가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주1회, 3시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표1】**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요청자로부터 여비를 지급받는 외부강의·회의 활동시에는 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 【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 1시간)

구분(상한액)	임원급	책임급	선임급이하	비고
최초1시간	4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그러나, 신고된 외부강의·회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직원 69명이 2년 동안 84건의 기간 및 대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강의 및 직무관련 강의·강연을 하였으며, 요청자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총 17건의 출장여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있다.

### 다. 조치할 사항

① 원장은 앞으로 소속 직원이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21조 및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어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의·회의 등을 수행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성 대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142, 2015.09.30.)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장은 대가성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위반자 206명 및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 위반자 69명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출장비 이중 수령자는 제외)

③ 원장은 관련자에 대하여 중복 수령한 출장여비를 회수조치 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환급 관리의 부적정

가. 관련부서 OO팀

나. 감사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훈련지원금 환급은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용지원을 신청하여야 훈련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연구원은 일반알림문에 ‘원외직무교육 교육수료 후 환급신청 방법 안내’ (2015.03.04. 일반알림문에 게시)를 하고 ‘원외직무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받은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훈련지원금 환급을 교육을 받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더라도 그 환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철저히 감독하여 환급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에 확인한 결과 연구원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미환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미환급 사항이 있는 것은 개인에게 신청토록 안내만 하고 신청 및 환급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이 없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이며, 그 결과 연구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건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을 환급받지 못하였다.

#### **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환급받지 못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을 환급받도록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프로 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4. 구매계약 업무 처리의 적정성

가. 관련부서    00팀  
                    00팀 안00  
          및  관련자    00팀 우00

### 나. 감사내용

#### ①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00팀 안00(책·행)은 정보통신부품소재연구소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유기용제외 지정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하여 「구매요령」 제13조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을 자체 보유, 운행하여야 함”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1차공고(2014.1.14.), 2차 재공고(2014.1.21.)에도 불구하고 (주)00 1개사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별하여 업종과 영업내용을 지정하고 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한 2013년말 기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대전에 사업자를 둔 업자는 5개업체가 있고, 수집운반업으로 충남, 대전에 사업장을 둔 업체는 14개 업체가 있으나, 입찰공고의 제한사항인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처리운반업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는 (주)00 1개사에 불과하다.

한편, 「회계규정」 제66조 계약방법에서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약담당자는 연구원에 이익이 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조정하는 등 입찰방식과 계약방법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지정폐기물의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자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정함

으로써 과도한 입찰제한조건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안00은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00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입찰참가 기회를 잃게 되었다.

## ② 입찰방법 부적정

00팀 우00은 고압배전반 및 기계분전반(MCC판넬) 내부 화재발생시 조기 진화를 통한 화재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2015년 7월 20일 수의계약에 의하여 00(주)와 고체에어로졸소화기 217개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회계규정」 제66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연구원 구매담당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물품의 성질과 구매목적, 물품생산 업계동향과 입찰경쟁의 성립여부 등을 판단하여 연구원에 가장 이익이 되는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시스템”의 기업정보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품으로 지정된 자동식소화기(물품분류번호 461960111)의 직접생산증명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체에어로졸소화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00(주) 외에 추가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00은 위 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인 경영관리본부 안전정보보안팀의 수의계약 요구에 따라 「구매요령」 제16조(수의계약) 제1호 바목(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 구매하여서는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00(주)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우00은 고압배전반의 화재조기진화를 위해 필요한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의 제조업체간 제품의 규격과 기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에 가장 적합한 사양을 제시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라는 이유로 입찰방법을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 **다. 조치할 사항**

① 원장은 앞으로 지정 폐기물의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장은 앞으로 입찰방법 결정과 관련한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5 .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비용 관리의 적정성

가. 관련부서    00팀

나. 감사내용

### ①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00팀(이하 “관련 부서” 라고 함.)은 지식재산권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 지출비용에 대하여 취하건, 포기건, 진행건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토하면,

해외특허의 경우, 출원전 출원여부 결정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등의 사유로 ‘취하’ 하는 건을 살펴보면, 취하 비율이 출원신청건 대비 2005년도 5.5%에서 2010년도 28.5%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출원후 ‘포기’ 건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6년간 총비용대비 31%(건수 대비 41.1%) 수준이다. 또한 해외특허중, 중간사건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중간사건 3회 이상시에는 포기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발생한 건은 13.5%수준이다.

그 결과, ‘중간사건’ 처리 관련 집행 비용을 살펴보면 해외특허의 경우, 특허건별 평균금액이 200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소요비용 중 3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행되고 있어, 지식재산권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② 지식재산권 비용 관리 부적정

연구원 지식재산권관련 비용은 간접비에서 총당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기획팀(전략기획본부 경영전략부 소속)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관리관련 예산 배정에 있어서 과제별로 반영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한 방식에서, 2010년도 이후에는 간접비로 통합 흡수하고 관련 예산을 별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부서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회계규정」 제12조 (예산의 집행)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실행예산에 따라 집행하되, 그 집행을 엄밀히 하고 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엄격한 통제관리로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하나, 2010년 이후 배정된 예산을 상회하는 지식 재산권 관리로 인하여 특허사무소로부터 청구된 금액을 미지급한 결과 2010년도 대비 2013년 12월 기준 167% 증가하였다.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엄격한 통제관리로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비용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③ 지식재산권 자문회사(특허법률사무소) 운영 부적정

관련 부서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을 위하여 다수의 자문회사와 계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해지된 회사는 기존에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던 특허건을 인계·인수없이 처리한 결과, 연도별로 계약된 자문회사외에 20개 ~ 36개 회사에서 추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문회사는 위임받은 특허건의 출원·등록에 관한 대리인의 업무, 특허명세서 작성 및 번역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해 연구원에서 위임한 특허의 완성도를 높이고 등록을 위해 제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해지된 자문회사에서 신의성실하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계약된 업체와 비계약된 업체의 평균 특허 등록율에서 국내는 9.2%P, 해외는 6.7%P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조치할 사항

① 원장은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정량적인 목표 이외에 질적인 목표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특허등록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장은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비용 집행 및 단위 업무 통계자료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③ 원장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한 대리인 업무 등의 위임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자문회사(특허법률사무소)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6.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등의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가. 관련부서 00팀

나. 감사내용

00팀(이하 ‘관련부서’)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구, 연구생산집적시설)가 건립된 2011년부터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의 공간을 사용할 입주기업 선정, 입주, 관리비 등 기업부담금 고지, 퇴실,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①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운영 업무의 기준이 되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종합운영계획 및 세부운영기준(2015.3.25.)」의 ‘기업연구생산공간 사용계약서-별첨 12’ 제4조, 8조, 9조를 살펴보면 입주 기업은 연구원에 계약체결 전 시설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매월 시설사용료와 시설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연구원은 계약 해지와 퇴실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기준의 ‘000시설 위탁운영 계약서-별첨 21’ 제10조, 17조, 19조를 살펴보면 입주 기업은 시설관리비 및 장비사용료를 매월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장비사용보증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3개월 동안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연구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원 임직원은 「윤리경영실천규정」 제7조 1항에 의거 부여된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매사에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여 연구원의

이익과 발전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위 관련부서가 운영·관리중에 있는 입주기업 중 12개 기업이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할 시설관리비 등이 체납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관련부서는 이들 미납기업에 대한 조치로서 독촉문서(내용 증명)를 보내는 정도이고 채권추심은 3개 기업(퇴실:2개기업, 입주중:1개기업)에 불과하다.

또한, 위 관련부서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선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에 “본 계약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37조에 의거 ‘을’ 이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승인’ 을 신청하여 지식경제부 장관(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51개 기업(퇴실기업 포함)중 14개 기업(3개 제외기관 포함)에 불과하며 37개 기업에 대하여는 입주승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위 관련부서는 회계관계직원<sup>1)</sup>에 해당하는 기업 입주 관련 계약, 기업부담금 고지, 수입·지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반 회계 관련규정에 준하여 장표, 증빙<sup>2)</sup>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치·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일자, 납부일자 등에 대하여 일부 자료를 파악 못하는 등 장부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입주기업이 기업 부담금을 청구금액보다 적거나 많이 연구원에 납입하는 경우 청구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 납입금액을 반환하고 다시 납입받는 등 업무처리를 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금 장기 미납기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업무지원 전산시스템은 고지서 발행(관리) 업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체계도 없다.

1) 「회계규정」 제16조(회계관계자), 77조(회계관계직원): 발의행위자(계정책임자) 및 계약책임자(부서의 장) 등

2) 「회계규정」 제23조(장표), 제24조(증빙서)

그 결과 장기 미납기업에 대하여 계약서대로 분명하게 처리되지 않아 오히려 체납기업 및 체납금액, 체납기간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하였다.

## ② 직무분장, 위임전결 기준 등 업무처리 근거 부적정

연구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 직제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바, 「직제규정시행요령」제2조(적용범위)에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직제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직제규정」제12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원장은 부서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어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임전결요령」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종합운영계획 및 세부운영기준(2015.3.25.)」에 의거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는 건립 후 10년간을 성과활용기간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최소 5년간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sup>3)</sup> 연구원의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선정·관리업무는 향후 10년이상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련부서는 수행하고 있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선정 등의 업무(계약 인장 관리, 입주 계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고지, 세금계산서 발급, 퇴실, 납부 독촉, 채권추심 등)에 대하여 연구원의 분장직무 및 위임전결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분장직무 및 위임전결 관련 규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반영되어 담당부서가 책임과 권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주기업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근거: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종합운영계획(2015.3.25.)」 - 5.연구생산집적시설의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위한 활용,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세부운영기준(2015.3.25.)」 - 7.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의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위한 활용」

#### 다. 조치할 사항

① 원장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 기업(퇴실기업 포함)의 시설관리비 등 장기 미납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 및 보증금의 귀속 등 적극적인 회수 방안과 입주기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장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제 수행업무를 분장직무 및 위임전결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7.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식당 위탁운영기업 시설사용보증금 징구 부적정

가. 관련자      ①00팀 책·연 유00  
                     ②00팀 책·행 박00

### 나. 감사내용

위 관련자 유00은 00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의뢰, 선정기업 입주 및 운영, 시설관리비 등 기업부담금의 고지 및 수입처리, 미납금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이하 ‘운영부서’)

위 관련자 박00은 00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융합기술생산센터운영팀이 의뢰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자 모집건에 대하여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계약부서’)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00(주)와 체결한 계약서의 시설사용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사용보증금을 계약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연구원 회계계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사용보증금은 구내식당 위탁운영자가 시설사용 중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 끼친 손해 등에 대한 상계비용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00(주)는 본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기업부담금(시설사용료, 시설관리비, 주방비품사용료)등을 매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연구원 회계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기업부담금 중 일부만 납부한 후 나머지에 대하여는 체납하고 있으며, 이에 운영부서는 납부 독촉문서(내용증명) 수회 발송, 기업 방문, 채권추심의뢰, 가압류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회수된 금액 없이 폐업되었고, 00(주)로부터 납부 받아야 할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하여도 운영부서와 계약부서 모두 계약 전 또는 계약기간동안 납부받지 않았다.

그 결과 00(주)로부터 시설사용보증금을 납부 받지 못하므로써 기업부담금 체납금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연구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 **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위 관련자들에게 00(주)로부터 납부 받지 못한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하여 회계규정 제79조 등에 의거 변상 및 인사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